"왜 하필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오거돈 사퇴 시점 의혹 확산

野 "청와대·민주당 몰랐다는 말 믿을 국민 없다"

부산시 · 與 "사퇴시점 조율 · 靑 보고 사실무근"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 9층에서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논란이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 등에 다르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 사퇴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약속한 '공증'을 벌인 곳은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곳으로 전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운영한 합동법률사무소다.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다.

이같은 인연을 이유로 야권에서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사퇴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총선 직전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부산과 문 대통령 등 청와대의 인연을 지적하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 역시 "법무법인 부산과 청와대는 상시 연결되는 채널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의문이다. 청와대가 해명해야 하는 상황"라고 청와대를 직격했다.

이언주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문정권 실세로 불리는 자"라며 "굳이 거기서(법무법인 부산) 공증한 이유는 정보가 샐까봐 그랬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상의한 다음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했다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게이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성추행 사실 발표 시기를 두고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다.

성추행은 지난 7일 오 전 시장 집무실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피해여성이 이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이후 부산시 정무라인에서 성추행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여성,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이후 조치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야권은 총선 이후 발표를 결정하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부산시와 오 전 시장 측은 사퇴 당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등 최고위직 인사한테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사퇴를 위한 '공증'까지는 했는데도 '인수인계' 등의 과정도 없이 사퇴한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법무법인 부산까지 등장하면서 당장 이번 사태가 정치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법무법인 부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전 시장 측 역시 "사퇴시점 조율이나 청와대 보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호 기자

'김정은 건재' 힘보태는 정부…근거 제시로 說 차단

김연철 · 문정인 · 정세현…밀려드는 외신 · 가짜뉴스

정부 발언 신뢰성 높이고 뒤숭숭한 분위기 조기 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름째 두문불출하며 건강이상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김정은 건재'에 무게를 실으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멈춘 것은 27일 기준으로 16일째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 ·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하면서 그의 와병설 등 신변이상설은 점점 확산됐다. 김 위원장의 상태를 두고 온갖 추측도 난무했다. 급기야는 유고설까지 제기되며 전 세계가 김 위원장의 행방을 주목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김 위원장의 유고설을 사실상 부인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23일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한반도평화만들기가 개최한 '한 · 중 비전 포럼'에 참석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건 기술정보를 포함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보 평가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정보 평가의 과정과 근거에 대해선 그 특성상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2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13일 이후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 아직 아무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이후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있다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보도와 일치한다.

이와 관련, 인공위성이나 통신 등으로 얻은 대북 정보들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위치 및 상태를 파악해 공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원산에 갈마비행장도 만들고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휴양시설이 많다. (김 위원장이) 거기 가 있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사진을 보니 걸어 다니더라, 일 없다(괜찮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탁상공론 정치 그만해야"…43일만에 대구 찾은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인사 나누고 있다.

"정치는 책상에서 탁상공론으로 논하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점을 찬찬히 살펴보고 부딪히면서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정치권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

27일 대구에 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봉사 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았다.

그의 대구 재방문은 4 · 15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달 15일 상경한지 43일 만이다.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 국민의당 비례 최연숙 당선자, 권은희 의원(당선자), 김도식 당 대표 비서실장 등과 함께 대구로 내려온 그는 동산병원 별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종인 비대위 끝까지 '어수선'

3선 당선인들, 전국위 하루 전 "당선인 총회부터" 반발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결에 나선다.

통합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열고 최고위가 결정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8월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선다.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하면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 '김병준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27일 오전 통합당 3선 당선인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당선자 총회를 먼저 개최한 후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반발'을 한 셈이다. 만약 3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위원을 설득해 '불참'을 이끌어내 전국위를 무산시키거나 김종인 비대위 안건을 부결시키면 통합당은 총선 참패 속 다시 내홍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3선 당선인들의 전국위 개최 연기 요청에도 '전국위'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에 따르면 현재 상임 전국위원은 50여명, 전국위원은 600~700여명 가량이다.

통합당은 28일 오후 우선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을 작성한 후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일단 전국위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이날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참여 독려 작업을 계속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김용태 혁신위와 2017년 인명진 비대위가 각각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 · 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